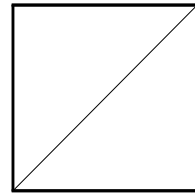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6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 15. (제 1 차)

의
결
사
항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 15.

1. 의결주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제2호의2)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조치 대상이며, 금융회사 외 일반 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이에 검사·제재 규정 준용시 일부 한계가 있어, 동 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 마련

- (1)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 마련(별표 제2호의2 제3호나목(1))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비율을 5 ~ 15% 상향함

(2) 규정 해석을 통해 운영 중인 제재 강화방안에 대한 명문 근거 마련 등

(가) 주체·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일자 등이 다른 경우 각 행위를 구별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별표 제2호의2 제2호나목(2))

(나) 계속·반복적 위반행위는 고의가 없더라도 동기를 ‘중’으로 판단함(별표 제2호의2 제3호나목(2))

(다) 호가규제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결과를 ‘보통’ 이상으로 판단함(별표 제2호의2 제3호나목(2))

(라) 금융기관 위반시 동기를 ‘중’이상으로 판단(별표 제2호의2 제3호나목(2))

(3)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 제2호의2 제4호가목(2))

다.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 정비

(1) 소액공모 공시위반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 완화(별표 제2호의2 제4호나목(1),(2))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최대 50%)하여 제재 불균형을 완화함

(2)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 조치 등 근거 마련(별표 제2호의2 제5호나목)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동일 규제 위반에 따른 가중사유를 합리화(별표 제2호의2 제4호가목(1))

소액공모의 경우,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5년 → 1년)함

(4) 하나의 소액공모 관련 복수의 위반행위 발생시 합리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제2호의2 제2호나목(3))

하나의 소액공모와 관련하여 수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의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함

라. 기타 개정사항

(1) 가중·감경 사유에 대한 합산기준 마련(별표 제2호의2 제4호)

가중비율과 감경비율을 합산하여 예정금액에 적용하되, 최종 부과금액은 예정금액의 $\pm 50\%$ 범위 내로 함

(2) 보고·공시기한 이전 하자 치유에 따른 감경사유 신설(별표 제2호의2 제4호나목(3))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해 보고·공시기한 이전에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조치기준상 면제사유 반영(별표 제2호의2 제5호가목)

다른 조치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면제사유에 조사업무 규정상 조치기준의 면제사유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10.17.~11.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제429조의2 및 제430조”를 “제429조의2, 제430조 및 제44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449조제1항·제2항”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가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9조제1항제20호(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제36호·제37호·제38호·제39호·제39의2호·제39의3호·제39의4호, 제3항제7호·제8호(법 제131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158조제1항, 제164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제8호의2·제8호의3·제8호의4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같은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1)의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 법 제449조제1항제39호부터 제39호의4까지 및 제3항제8호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하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자가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로서 주체·사유가 동일하더라도 종목·일자 등이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행위를 구별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3)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법 제449조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하나의 소액공모와 관련하여 법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2개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태료를 각각 부과

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마.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나. 다만,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과태료 부과비율 기준

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90%	기준금액의 75%
보통	기준금액의 90%	기준금액의 75%	기준금액의 50%
경미	기준금액의 75%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위법행위의 동기

- a.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 b.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닌 계속·반복적 위반행위 등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c.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만,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법행위의 결과

- a. 중대 :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호가의 형성 포함),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 b. 보통 : 기타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c. 경미 :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격 형성(호가의 형성 포함) 및 거래량 등 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다만, 위반행위가 호가 규제 위반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최종과태료 부과 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차감한 비율을 예정금액에 적용하며,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한다.

가. 가중사유

- (1)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법 제449조제1항제3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이하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라 한다)는 1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 (2) 공모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사유

- (1)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경우 공모금액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정금액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위반 유형	감경사유
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②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제출 ③ 청약증거금 관리	실제 모집·매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④ 소액공모 감사보고서 제출 ⑤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 ⑥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 매출서류 제출	위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아니거나, 주주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 (2)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기관 인지 전에 시정 또는 신고한 경우, 당해 예정금액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단,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정일수	3일 이내 시정	4~6일 이내 시정	7일경과 후
감경비율	50% 이내	40% 이내	30% 이내

- (3) 보고·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해 투자자가 보고·공시의무 대상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보고·공시기한 이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등

가. 위반자의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 (4)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조치의 실효가 없는 경우

나. 소액공모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6조 제5항·제8항, 제429조, <u>제429조</u> <u>의2 및 제430조</u> 와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 376조, 제377조 및 제37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 융위"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 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 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 증선위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 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 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 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제429조</u> <u>의2, 제430조 및 제449조</u> ----- ----- ----- ----- ----- ----- ----- ----- ----- ----- -----
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제3절 조사결과 조치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 는 위법행위가 <u>법 제449조제1</u> <u>항·제2항</u>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 ----- <u>법 제449조제1항</u> <u>부터 제3항</u> ----- -----

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신 설>

제5장 보칙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 3. (생략)

<신 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③ 금융위는 별표 제2호의2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준용규정) -----

-----.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

만,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
료가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
정한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88